

지역시민언론운동의 평가와 개혁과제

- 지역신문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우희창(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1. 문제제기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제대로 된 평가는 거의 없었다.
- 아울러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도 거의 없었다.
- 특히 지역신문과 관련된 평가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는 지역방송에 비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역시민언론운동, 특히 지역신문과 관련된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시급하다.
- 이 발제문은 지역시민언론운동의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문제제기의 수준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놓으려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 지역시민언론운동¹⁾은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듯 지역의 시민을 운동의 주체로 삼는다. 이론적 토대는 시민사회론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은 국가에 대항하여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²⁾ 시민사회론은 크게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적 시민사회론으로 구별할 수 있다.³⁾
-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으로의 언론운동을 ‘언론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을 만들어 개별 수용자를 대신해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개입하는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운동의 주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되며 운동의 대상은 주

1) 시민언론운동이라는 용어는 그간 사용되어오고 정착되어 왔는데, 그러한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시민언론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언론운동의 관점과 지역시민운동의 관점이 결합됐으며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함.

2) 임동욱(1995).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성격과 방향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봄호.

3) 원용진(1999). 90년대 시민언론운동 점검. 저널리즘 통권 40호.

로 언론이지만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변 환경도 대상이 된다.

- 비판적 시민사회론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 헤게모니를 위해 언론을 당파적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끌며 이를 거부하는 언론을 감시 비판하며 대안적인 언론을 만드는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의 주체는 계급적 혹은 계층적 대표가 되며 운동의 대상은 언론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뛰어넘는 시민사회 구성원이 된다.
-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9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론적 담론의 틀에서는 비판적 시민사회론이 우세한 모양새를 이뤄 양자간 괴리가 있다고 보았다.
- 현재의 운동 양태를 살펴보면 운동의 주체가 시민, 즉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계급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다.⁴⁾ 또 운동의 대상도 주로 언론이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과 때로는 시민사회 전체이기도 하다.
- 구체적으로 들어가 시민언론운동의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운동이론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통제이론은 언론수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행동화에 대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 혹은 여론조작의 대상자이거나 광고주에 대한 구매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재의 언론과 독자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시키려는 노력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다.
- 사회운동이론은 세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①고전모델은 개인의 심리적 동기를 운동의 발생요인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이론이다 ②자원동원론은 개인적 차원의 동기화 못지않게 운동조직 및 단체의 운동자원을 동원하는 방법 및 조직화와 연대의 과정은 운동이 전개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작동요소다. ③신사회운동론은 근대 민주주의 원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체제에 일방적으로 복속된 환경과 삶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회복하려는 것으로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방어를 목표로 풀뿌리 조직을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문화적 혁신을 추구한다.
- 언론운동은 일차적으로 언론을 개혁하자는 운동이며 언론을 민주화시키자는 것이다. 언론의 민주화도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며 언론민주화는 사회민주화라는 목표에 닿아있다. 언론활동이 기본적으로 사회민주화에 역행하는 제반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사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민언론운동은 기존 언론의 민주화, 내부개혁운동의 견인, 사회민주화를 위한 언론운동의 지향성 견지라는 세 가지 목표 또는 과제를 안고 있다⁵⁾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언론운동은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4) 담론의 틀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민연련과 지역 민연련이 내놓은 모니터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에 대한 모니터의 기준이 명확하며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고서들이 수두룩하다.

5) 김서중(2001). 시민언론운동의 목표와 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 21세기 시민언론운동.

- 현대 독점자본주의 사회의 언론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즉, 국가와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언론이 소수의 독점 하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들이 그 증거이다.
- 시민언론운동은 이처럼 권력과 놀아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제도권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시민이 전문적인 언론인에게 정보제공과 권력 감시 역할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대안적인 매체를 구축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인 공공영역을 회복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권력의 책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적 작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언론운동의 기본적인 목표이다.⁶⁾
- 한국 제도언론의 본질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언론운동은 언론에 의해 관철되는 권력과 자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로부터 언론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⁷⁾
- 지역시민언론운동은 지역운동이자 시민운동이면서 언론운동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 시민운동이면서 지역언론운동이면서 시민언론운동이다. 최종 지점은 역시 지역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 전국적인 의제와 이슈를 갖고 부문운동으로써 지역에서 펼치는 운동도 지역시민언론운동의 범주에 속하지만(안티조선운동, 신문개혁운동 등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권력인 지역 언론(여기서는 지역신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지역의 기득권 세력 전체도 포함된다)을 감시, 비판함으로써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언론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역성을 구현시키는가가 중요하며 그 지역성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맞닿아 있다.
-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기존연구 : 대부분 시민언론운동의 활동의 효과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수용자 운동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연구⁸⁾였으며 이마저도 2000년대 초반을 넘지 못한다.
-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연구⁹⁾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평가와 개혁과제 도출한 연구¹⁰⁾는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6) (2001). 지역언론의 현실과 대전충남 민언련의 과제. 대전충남민언련 하계 임원수련회.

7) 최민희(2001).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론운동을. 언론개혁시민연대, 21세기 시민언론운동.

8) 김기태(1994). 한국의 언론수용자운동. 언론과 수용자. 한국언론연구원

9) 나세홍·조정관(2016).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NGO연구 제11권 제1호.

10) 채백(2004). 부산지역시민언론운동의 현황과 전망. 언론과 정보 제10호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문제 1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시민언론운동 평가

연구문제 2 : 지역신문과 관련된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과제

연구문제 3 : 개혁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

- 연구방법 : 현업운동가인 전국언론노조 소속 지역신문 지부위원장 3명/현직 지역시민언론운동 활동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심층인터뷰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일보 노조위원장	A지역민언련 활동가
B일보 노조위원장	B지역민언련 활동가
C일보 노조위원장	C지역민언련 활동가
D신문 노조위원장	D지역민언련 활동가
	E지역민언련 활동가
	F지역민언련 활동가

4. 지역시민언론운동의 현황과 평가

1) 지역시민언론운동의 현황

- 현재 시청자단체 혹은 영상운동단체, 마을공동체 운동단체 등 언론운동 내에서 부문운동에 주력하는 단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종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시민언론운동 단체는 손에 꼽을 만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물론 그동안 언론문제를 다루는 연대단체로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언론개혁시민연대, 제주언론개혁시민연대, 대구참언론시민연대, 지역언론개혁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활동이 중지되거나 해체된 상태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8년에 결성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알 수 없애 이 글에서는 제외했다.
- 본격적인 지역시민언론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 이후 각 지역에서도 정치개혁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정치개혁의 완성은 언론개혁이 이뤄져야만 될 수 있다는 지역적 열망이 쏟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 그러나 광역별로 보면 아직까지 경북, 강원, 제주도에선 언론을 감시 비판하는 종합적인 시민언론운동단체들이 구성되지 않았다.

2) 지역시민언론운동의 평가

- 그간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의견과, 지역시민언론운동이 약화되었다는 평가, 무리 없이 활동했지만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견 등으로 나뉜

지역언론운동에 대해서는 지역 민언련 내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A지역민언련 A활동가)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질 못한 것 같다. 물론 매년 전국의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평가하고 과제들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나마 방송 부문은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신문은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F지역민언련 활동가)

지역시민언론운동이 지역 내에서 지역 언론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기 보다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라든지 하는 제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강조되었던 것은 문제라고 본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면에 집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B지역민언련 활동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시민언론운동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덩달아 지역시민언론운동도 많이 위축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지역시민언론운동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본다. 이슈가 있어야 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조국 국면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도 많이 달라졌고, 자기와 직간접적인 영향이나 관심도가 부각되었다고 보는 거다.(C지역민언련 활동가)

5.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 과제

1) 저널리즘 바로 세우기

- 통신사나 보도자료 받아쓰기, 광고강요, 편집권 독립, 투명한 기자채용, 자치단체 홍보비나 협찬 문제,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의 문제, 보도의 편향성 문제 등

받아쓰기 패턴이 여전하고 발로 쓰는 기자가 없다. 저널리즘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흥

보자료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가 대부분이다. 월급이 적고, 그나마 제 때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현장엘 나가도 광고나 하러 다닌다. 이런 문제들을 고치지 않으면 지역신문의 미래는 없다.(D지역민언론 활동가)

편집권 독립이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광고 같은 거 따내려고 기획기사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이 지역 목소리를 담는데 소홀하다. 지역 의제를 기획기사로 계속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한 채용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자꾸만 경력직만 뽑는데, 기자들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많다. 젊은 기자들이 없고 체제에 순응하는 기자들만 뽑는다.(A일보 노조위원장)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젊은 기자들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기자들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나이 먹은 기자들이 고착화되고 루틴하게 기사를 쓰는 것이 문제다. 출입처나 지자체 광고 때문에 받아쓰기만 하는 관행도 심각하다. 통신사 받아쓰고 지자체 보도자료 받아쓰는 것이 현실이다. 인력이 안된다. 일간지 편집국에 취재기자가 10명도 안된다. 그러다 보니 베껴쓰기 기사가 많고 신문사가 발전되지 않는다.(E지역민언론 활동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저널리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지역사회 공론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담아내지 못한 채 생존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지역신문이 사실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광고주들의 지면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기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다.(A지역민언론 활동가)

지역언론의 개혁과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걸려있는 것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자치단체 주차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이 바뀌면 관행도 바뀌어야 하는데,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심각하다. 여전히 관행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각종 홍보비나 협찬금 등도 마찬가지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C지역민언론 활동가)

그동안 개혁과제라고 내놓았던 것들이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과제 아닌가? 홍보비 문제, 취재관행의 문제, 개발담론에 경도된 보도들의 문제 등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널리즘 문제를 개혁과제로 보는게 타당하다.(B지역민언론 활동가)

2) 제도 개선과제

-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선, 포털문제 개선-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사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지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 반면, 지역시민언론운동가들은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광역단체에서는 일간지를 지원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주간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광고홍보비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문을 지원하되 이들 신문을 모니터해야 한다. 지역신문지원법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석을 고른다는 입장으로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몇 군데 제대로 된 신문을 대폭 지원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신문들을 지역에 많이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지원액도 별로 없고 받아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어도 메리트가 없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언론운동이 노력해야 한다.(D지역민언련 활동가)

네이버 문제다. 지역신문 3개사가 네이버 검색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충청권과 전라 경기권은 모바일을 통해 지역신문을 볼 수 없다. 모바일에서도 지역신문의 뉴스가 다양하게 검색되어야 한다. 광고가 일단 힘들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역신문지원제도를 통해 포털쪽에 인센티브를 갖게 해야 한다. 지발위 선정사에 대해 포털 제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다 검증된 언론사이다. 최저임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오히려 중앙지보다 편집권이 라든지 다 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B일보 노조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아무래도 지역신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언론사별로 교육을 특성있게 하면 좋겠다, 지금 유튜브 등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러한 것을 교육도 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을 교육도 하고 지역 언론이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A일보 노조위원장)

언론사 사주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발위가 전문가 지원하고 인턴지원하고 했던 것처럼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홍보예산을 지발이 선정된 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막 나눠주고 있어요.(E지역민언련 활동가)

지발법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게 되었다. 지발법이 실제로 경영지원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단지 법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와버린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에 종속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광고를 배정하는 문제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C일보 노조위원장)

현재 상태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의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매우 어렵다. 법적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A지역민언련 활동가)

지역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신문법의 개정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데, 사실 각 지역단체별로 그만한 여력이 안되는 것 같다. 지역신문 처한 여건이 어렵고 지원되는 기금의 액수는 별로 되지 않으니 개혁을 요구하기엔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할 듯 싶긴 하지만 근본적인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언발에 오줌싸기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F지역민언론 활동가)

6.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 과제 해결책

- 제도적 해결책 마련, 비판감시 기능 강화, 연대의 강화, 운동영역의 확대

지역신문법에 명시된 독자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신문에 대해 제안도 하고 약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독자위원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 아무리 1인미디어라든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올드미디어들이 여전히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혁의 문제는 신문사가 어렵다보니 노조들이 다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 복지만 생각하고 있지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이다. 이러한 부분은 끊임없이 연수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D지역민언론 활동가)

답이 없다. 지금 기자들이 아무래도 편집국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편집규약 등이 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다. 편집자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 밖에 있는 신문사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데스크들하고 소통도 해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들이 주체적이지 않다. 외부에서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시민언론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A일보 노조위원장)

지역신문들의 공론장 역할은 비관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편파, 왜곡기사, 외면기사 등이 허다하다. 이슈를 아예 묻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공론장이 되겠나? 지역언론이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시민사회에서 지역언론을 감시 비판하고 목소리도 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각각의 단체들도 매우 힘들어 하는 것 같고, 예전처럼 연대도 잘 안되는 것 같다.(E지역민언론 활동가)

지자체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모두 죽었다. 그러다보니 신문광고도 죽었고 페이지에 대한 광고는 특히 힘들다.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해결책은 없다. 일간지는 더 이상 고용할 능력이 없다. 매출 신장,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고, 인력의 질적 저하는 이미 10년 이상 되었다.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책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신문사에 유능한 기자들이 오지 않고 지자체에 광고의존도는 너무 심화되어 이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D일보 노조위원장)

시민언론운동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문에 포커스를 맞춰나가야 한다. 언론단체들이 계속 나서줘야 김영란법이나 지발위법이 효과가 있다. 언론단체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지 개혁이 이뤄진다. 언론이 스스로 자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C지역민언련 활동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지역시민언론운동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독자의 주권이나 역할들을 독자로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써 중심축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대조차 어렵다. 하지만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언론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지역신문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A지역민언련 활동가)

매체환경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시민언론운동 진영이 대처해야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다만 운영영역을 확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역신문은 중요성이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역방송은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 신문들은 기능들이 약화되었다. 미디어 지형은 인터넷 매체라든지 SNS, 포털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매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으로서 신문 등이 기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응이 잘못되면 신문사는 망하게 될 것이다.(B지역민언련 활동가)

7. 지역시민언론운동과 관련한 기타 두서없는 질문들

1)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 질문

- 과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말하는 여론의 다원화는 무엇인가?-기존 조중동의 독과점이 문제인가? 아니면 포털의 횡포가 문제인가?
- 현재의 지원방식과 기금액수 선정방식으로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 지역신문은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기금은 주던 것이니 계속 달라는 것인가?
-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이 맞는가? 아니면 종료할 것인가? 혹은 연장할 것인가?

1)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질문

- 지역시민언론운동은 지역신문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동해 낼 능력(인력, 재정, 전문성 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해오던 것이니 하는 것인가?
- 지역 인터넷 신문을 운동 영역에서 어떻게 대상화 할 것인가?-현재의 지역신문이 지역 사회 공론장의 역할, 지역사회 변혁의 중심축으로 역할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공통분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대하고 있는가?
- 지역시민언론운동의 지역성은 무엇인가?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해 지역시민언론운동은?
-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지역시민언론운동은 가능한가?

8. 결론

- 그간 지역시민언론운동의 평가나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부족했음
- 특히 지역신문에 대한 개혁과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치중해 논의가 전개되었음
-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시민언론운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시민언론운동의 개혁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업 언론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와 지역신문 개혁과제에 대한 일정한 괴리가 있음
 - 간극을 메꾸어 연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국 전 장관 관련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 저널리즘 원칙과 취재보도 관행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은 단지 지역신문과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도 언론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사회가 민주화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완성. 이를 위한 지역시민언론운동가들의 공동의 고민이 필요하며 그것이 시민언론운동의 발전 토대로 작용할 것임